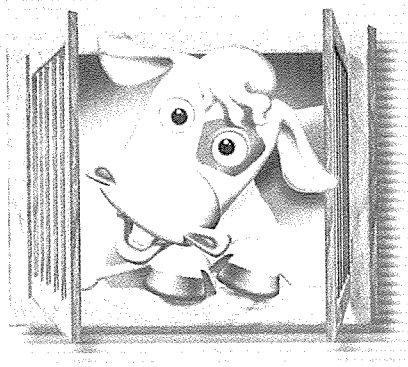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미산 조제분유 금속 검출에 농림부, "고강도 행정처분"

농림부는 최근 미산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해당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고 자력을 가진 물질이 이물질인지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이물질 여부를 조사 분석토로 조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상 이물질로 판단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해당제품을 폐기처분 조치키로 했다. 특히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농림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미국에서 수입해 유통, 판매중인 조제분유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자력을 가진 금속성 물질이 검출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제품은 제조과정과 품질관리가 국산보다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던 제품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장 김인식씨, 산림청장 서승진씨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농촌진흥청장에 김인식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을, 산림청장에 서승진 국립산림과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인식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1954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상대 축산학과 졸업 후 낙농육우협회 전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WTO범국민연대 사무총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과 농어촌 ·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을 역임했다.

서승진 신임 산림청장은 1953년 충남 청양 출신으로 기술고시 14회다.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임업경제학 석사와 서울대 산림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산림청 근무 동안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1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부임 이후 성과지향적으로 기관을 운영, 행자부 주관 책임운영기관평가에서 4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임 유가공협회장에 이규태씨 선임

한국유가공협회느 지난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 매일유업 이규태 부사장을 제 10대 신임 상근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김명길 협회 상근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우협회 남호경회장 재선출

한우협회 제3대 회장에 남호경 현 회장이 재선출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월 24일 대전샤또그레이스호텔에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남호경 현회장과 김병선 경기도지회장이 회장 경선을 벌인 결과, 남호경 현회장이 선거 참여 대의원 204명중 1백48표를 얻어 재선출됐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남호경 회장을 중심으로 한우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더욱 강력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재선출된 남호경 회장은 "한우인들의 성숙한 모습에 고맙다"고 말하고, "앞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기탄없는 지적과 제언을 당부한다"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더욱 힘있는 협회를 이끌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날 경선에 참여한 김병선 경기도지회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미력이나마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6억2천여만원 규모의 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인들이 더욱 일치단결할 것을 다짐했다.

공익수의사 2007년 현장 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제정안, 병역법개정안을 모두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공익수의사법과 병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07년 5월에 공익수의사가 전국 지자체에 배치되고 실제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수의사제란 수의사가 지자체 등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도 의결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HACCP 인증기준원이 설립되고, 닭고기 · 오리고기 등 가금육은 반드시 포장상태로 유통 판매해야 된다.

축산물에 도축장 실명제 도입

앞으로는 축산물 판매시 이용 도축장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을 확인 후 구매토록 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LPC 운영개선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특히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수수료 현실화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과 경영상태(계열화비율, 도축물량, 가공비율, 손익)를 병행 평가한 후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고, 양돈 계열화사업 및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HACCP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도축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전체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LPC의 도축가동율 및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영정상화는 미흡한데다 사육두수에 비해 도축능력이 과다하여 도축장 가동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다.

'축산자조금 운용 법안'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등으로 정했다.

농림부, 축산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농림부는 종축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지정기관을 종축등록기관에서 가축개량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축의 수출입신고업무를 현행 종축개량협회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또 종축업 대상에 종오리와 그 씨알을 포함하고, 개량대상 가축에도 오리를 포함키로 하는 한편 가축의 검정대상에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도 포함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종축 해당업종 생산자단체를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 종축의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까지 사후관리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BSE 수입축산물 폐기 처분 국가 책임 없다" 판결

2003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BSE로 인해 수입 중이던 축산물(소 곱창)이 검역 과정에서 폐기 조치된 데 대해 수입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월 10일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심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의 행사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국가가 위험제품에 내린 긴급조치라면 이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긴급 위생조치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국경검역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업 개방화 대비 5대과제 '올인'

농림부는 올 축산정책을 축산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서 민감품목인 축산물은 협상시 양허제외, 관세일부 인하,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등 예외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브랜드 육성을 통한 소비자신뢰 확보,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 확산,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등 방역 강화, 수출확대와 신성장산업 발굴·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 이 5대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개방화 시대에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축산물브랜드를 중점 육성하고,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돼지 사육단계에 HACCP을 적용한 다음 점차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가고 농가의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또 품질 향상을 중시하는 가축개량체계를 갖춰 나가는 한편 고유한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동물유전자원센터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가축분뇨·퇴·액비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시켜 자연순환형 농업모델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돼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생국을 오가는 비행기·배·여객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질병 예방과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정 전염병을 재분류하고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FTA에서 축산분야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외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등 지원방안, 피해구제 방안,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등 국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우유 새 이사 선출

서울우유 15대 이사에 새로운 얼굴 4명이 선출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4년간 서울우유 이사직을 수행할 9인을 선출했다.

총 15명이 출마, 1명이 기권한 선거에서 이상만(동북부) 이사, 박민길(안산) 이사, 목정배(서부) 이사, 배인호(동남부) 이사가 새로 선출됐다. 이재문(남부) 이사, 이윤교(경인) 이사, 이명식(동부) 이

사, 박용선(동남부) 이사, 문진섭(서부) 이사는 14대에 이어 15대에도 대의원의 신임을 받아 연임하게 됐다.

한편 이 날 대의원들은 지난해 매출액 1조378억원, 순이익 42억 5000만원의 2005년 결산보고서(안)을 승인하고 대의원총회의 회장으로 원유국 동복목장 대표를 추대했다.

방역본부 환경측정장비 순회 · 집체교육 완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가 환경측정장비 순회 및 집체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축 사양관리 컨설팅 등 방역서비스 제공에 돌입했다.

지난 1월 13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북, 충남, 경북, 전북, 강원, 경남, 전남 순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국의 방역사 205명을 130개 조로 구성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이뤄졌다. 이론교육은 측정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교육이 있었으며 실습교육은 농장 현장에서 직접 측정장비를 활용한 방역환경 측정 방법, 데이터 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현재 방역본부는 방역환경 측정장비는 가스측정기 98대, 비접촉식 온도계 130대, 온 · 습도 기로계 40대, 기류측정기 40대, 온 · 습도 풍속계 13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구제역 청정국' 이어나가기 총력

농림부는 지난 2월 24일 각 시 · 도, 검역원, 축산연구소, 농협, 축종생산자단체, 가축방역본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회의를 열어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17개 과제를 선정, 잘된 사항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보강 및 신규로 발굴, 구제역이 이 땅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강도 높게 추진함으로써 구제역 청정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2000년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의 원인을 수입건초와 해외여행객의 신발과 휴대축산물로 추정되는 만큼 병원체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해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해외 발생 동향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농장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국경검역 못지 않게 국내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 및 가축질병 예찰의 날'을 정해 소독과 함께 예찰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2002년 두 번째 발생한 구제역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 외국인 연수생 및 중국 현지 종돈장 경영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장과 축산시설의 소독실태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처분키로 했다.

축산물 피해 최소화 다각 노력

농림부는 한 · 미 FTA에서 쌀을 비롯해 국내 쇠고기 ·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파일류, 유지작물 등 민감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월 13일 2006 농림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고려할 때 한 · 미 FTA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쇠고기 ·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파일류, 유지작물 등이 민감한 품목으로 판단된다"며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어떠한 형태로든 농업분야 예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오는 6월 완료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캐나다와의 FTA협상도 축산물 등 관세철폐 예외품목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발췌: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